

종 합 토 론

◆ 임 경 속 (전 경상남도 의원)

-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원과의 차별성

제가 6년 동안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서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정말 구제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재위원회 조정신청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재판기관인 법원과 조정기구인 중재위원회의 역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약하다, 강하다 단순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여전히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언론보도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용 기 (진주시청 공보관)

- 언론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자 자격제가 필요

발제자께서 경남 지역 언론분쟁의 특징으로 언론사 간 분쟁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자 자격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칫 파격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성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청 출입기자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자들이 전문화된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남 석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남지역 높은 신청건수의 원인과 피해예방교육의 필요성

언론중재제도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이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빼고 경남 지역이 언론사 난립이 적고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언론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도민들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식과 권리의식이 높은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언론활동이 안정되어 있으니 언론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측면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학자로서 생각하자면, 지역 신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이 보기에는 언론사들이 성가신 존재로 보이겠지만, 사실 지역 언론이 충분한 언론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이 자기 검열을 해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남지역에 사건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지역 언론들이 자기 검열을 좀 덜 한다, 비교적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이나 공적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취재나 보도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을 하신다니 경남지역 신문들과 협의해 정기적인 상시 교육을 한다면 경남지역은 타 지역보

다도 훨씬 더 언론중재제도와 더불어 언론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병 섭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무분별한 피해구제 신청인에 대한 대응방안 존재여부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혹시 없겠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 성 운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 기자 전문자격제도 시행의 어려움

전문화된 기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언론인들도 자격증 시험을 쳐서 방송국이나 신문사로 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자유 아닙니까. 언론자유를 위해 자격제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한 광 호 (영산시민신문 편집국장)

- 정립된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열악한 언론사들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

인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언론사는 언론의 독립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선진국 중에 언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로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가판대 설치부터 지역 언론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선에서는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지역 풀뿌리 신문들은 여러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신문사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신청의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극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3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세계 15개국에서 20여명의 언론인, 언론학자, 언론평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들도 우리 언론중재제도를 높이 평가했고, 나아가 자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고 도입할 의사를 비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자율구제제도인 언론평의회제도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와 유사한 보다 강력한 규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고 본다면 우리 언론중재제도가 모든 면에서 완벽

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점에 대해 비판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 민 수 (경남중재부 중재부장 - 사회자)

여러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